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현상백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나수엽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044-414-1072)

김영선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전수경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sgjeon@kiep.go.kr, Tel: 044-414-1057)

차 례

1. 한·중 경제관계 발전 개관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무역/투자/금융·통화
3. 정책적 시사점: 한·중 경제협력의 신(新) 패러다임 구상

주요 내용

-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함(2016년 기준).
 - 한·중 경제협력 발전과정은 협력 범위 및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 초기(1992~2000) △ 성장기(2001~08) △ 확대기(2008~15) △ 전환기(2015~현재) 등 4단계 발전단계를 거침.
 - 양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노동·토지와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한·중 양국은 글로벌 교역 및 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한·중 양국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왔음.
-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주로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분업구조 구축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투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함.
 - [무역] 한·중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 중간재 대중국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 구축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2016년 한·중 무역액은 1992년 대비 33배 성장했으나,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투자] 한·중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호 보완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중국은 한국의 생산·가공 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2016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992년 대비 24배 성장했으나,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어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룸.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한·중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발전하여 한·중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은 상호 진출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위안화 국제화, AI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제도적인 협력도 증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경영난,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도, 중국 자본시장 이중성 등의 과제에 직면하였음.
- ▶ [시사점]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은 △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통상관계 구축 △ 대중 투자의 신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AIIIB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 △ 정부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한·중 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투자) 대중 투자 신 분야 발굴,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금융)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IB 활용방안 모색 등이 있음.
 - 또한 한·중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한·중 양자간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
 - 특히 지난 5월 한국에는 문재인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있는바,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한·중 관계 발전 개관

■ **[한·중 관계 발전]**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정식 수교를 시작으로 2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호혜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유대감,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외교,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

- [외교 관계] 한·중 외교 관계는 수교 초기(1992년) ‘우호협력관계’로 시작하여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로, 2003년에는 ‘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한데 이어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으로써 양자간의 관계를 넘어 다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발전함.¹⁾
- [경제 교류]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노동력·토지와 한국의 기술·자본이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함.
 - 2016년 한·중 무역액과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수교해인 1992년 대비 각각 33배, 24배 성장하여,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2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함.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고,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등 다양한 경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인적 교류] 한·중 간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 13만 명에서 2015년 1,043만 명(방중 한국인 444.4만 명, 방한 중국인 598.4만 명)으로 약 80배 증가함.²⁾
 - 2016년 현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6만 명(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57.7% 차지), 재중 한국인 유학생은 6.6만 명(재중 외국인 유학생의 29.8% 차지)으로 모두 수위를 차지함.³⁾

■ **[경제협력 발전과정]**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협력 범위 및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 초기(1992~2000) △ 성장기(2001~08) △ 확대기(2008~15) △ 전환기(2015~현재) 등 4단계 발전단계를 거침.

- 초기(1992~2000): 중국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대외개방 전략을 적극 추진하게 됨에 따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세금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한국은 주로 섬유·의류,皮鞋, 액세서리 등 노동집약적 임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진출함.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적고, 중국 동포가 거주하는 동북3성 및 산둥(山東)성 지역의 진출이 많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 공장부지 임대료,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 성장기(2001~08):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대외개방 수준과 인프라·투자 환경수준이 제고되었고 중국의 세계 공장 및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한·중 경제 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 한국 대기업들은 입지 조건이 좋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광둥 등 중국 대도시 및 동부연해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중국 본사 및 판매·생산 거점을 설치하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 하청업체들

1) ‘우호협력관계’는 중국이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는 양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단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양자간 경제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관계를 적용하는 단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넘어 다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북한 문제 포함)도 다루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보았음(김홍규(2011), 「한·중 수교 20년과 한·중 관계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3호 참고).

2)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중국 여유국 자료 참고.

3) 교육부 통계 자료(2016년 4월 1일 기준, 대학생 이상 대상).

의 진출도 활발하여 선단식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임.

-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중 제조업체들은 상호 보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남.
- 확대기(2008~15): 교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관계에서 더 나아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통화 협력이 강화되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됨.
- 한·중 양국 정부는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FTA 논의도 본격화됨.
- 다만, 중국의 토지, 노동력 비용이 인상되고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 등에 따라 기존 노동집약적, 임가공 중소기업 위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부정적인 요소도 동시에 존재함.
- 전환기(2015~현재):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체 고도화에 따라 한·중 경제협력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새로운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함.
-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체결('15.6) 및 발효('15.12)를 통해 한·중 교역·투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FTA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AIIB 가입 등 금융·통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내수주도 및 유효공급 창출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조업 고도화 및 신형 산업 육성을 위한 △ 인터넷 플러스 △ 중국제조 2025 △ '홍색 공급망'⁴⁾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제조업 수준 제고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는 △ 산업간 수직분업에서 산업 내 수직분업으로 △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연구 배경]** 한·중 수교 25주년(2017년 8월 24일)을 계기로 지난 25년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를 무역, 투자, 통화·금융 등 분야별로 회고·정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체제(2017년 10월경)에 부합하는 한·중 신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온 투자·수출 주도의 고속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내수주도 성장으로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속성장(新常态)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인해 중간재(시스템 반도체), 자본재(액정디바이스), 중저가 소비재(가전, 휴대폰) 분야에서 한·중 산업간 보완적인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어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 위주의 협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는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4)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이 수입해 온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여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완결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수입대체화 또는 국산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 한·중 경제협력 발전과정

기간	한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외교관계	경제협력 주요 내용
1992 ~98	노태우 (’88.2~’93.2)	양상쿤(楊尙昆) (’88.4~’93.3)	우호협력관계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국교 수립(’92.8.24) ■ 한·중산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94) ■ 한국 섬유·의류, 피혁, 액세서리 등 분야의 노동집약적 임가공업체 위주로 중국 진출 ■ 주로 산둥(山東)성, 동북3성 지역으로 진출
	김영삼 (’93.2~’98.2)			
1998 ~2003	김대중 (’98.2~’03.2)	장쩌민(江澤民) (’93.3~’03.3)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WTO 가입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한·중 교역 및 투자 양적 확대 ■ 완성차·금융·CDMA·원전·고속철도 등 5대 경협사업 합의(’98) ■ 차세대IT·미래첨단기술·전략산업·중국자원개발·고속철도·환경·금융·유통·베이징 올림픽·서부대개발 등 10대 경협사업 추진 합의(’03) ■ 정보기술·생명공학·신소재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 합의(’05) ■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광둥(廣東) 등 투자 환경이 양호한 동부 연해지역으로 투자 확대
2003 ~08	노무현 (’03.2~’08.2)	후진타오(胡錦濤) (’03.3~’13.3)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03)	
2008 ~15	이명박 (’08.2~’13.2)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통화스왑 체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대응 ■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문화, 관광, 교육 등 경협 확대 ■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보고서 서명(’09)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3)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14) ■ 중서부 지역 투자 확대 및 시장 진출
2015 ~현재	박근혜 (’13.2~’17.3)			
	문재인 (’17.5~현재)	시진핑(習近平) (’13.3~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체결(’15.6) 및 발효(’15.12)에 따라 상품 교역과 투자 중심에서 유통, 환경,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업협력 추진 ■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함에 따른 신 협력 패러다임 전환 모색

자료: 외교부(2016), 『2016 중국개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가. 무역

1) 한·중 교역 현황

- 한·중 양국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2,114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2년 대비 33배 증가하였고,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임.
- 한·중 무역액은 1992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5년 1,000억 달러, 2011년 2,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함.
- 2002~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40%대에 달하는 폭발적인 대중 무역 증가로 2004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한·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대중 수출액	증가율	대중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1992	27	164.7	37	8.3	-10
1995	91	47.4	74	35.5	17
2000	185	34.9	128	44.3	57
2005	619	24.4	386	30.6	233
2010	1,168	34.8	716	31.9	452
2011	1,342	14.8	864	20.8	478
2012	1,343	0.1	808	-6.5	535
2013	1,459	8.6	831	2.8	628
2014	1,453	-0.4	901	8.5	552
2015	1,371	-5.6	903	0.2	468
2016	1,244	-9.3	870	-3.6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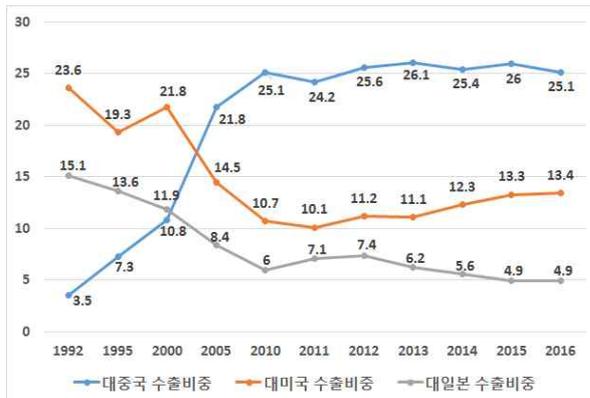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1,244억 달러로 46배 증가하여,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3.5%에서 25.1%로 수직 상승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미국(13.4%), 일본(4.9%)을 합친 것보다 높음(그림 1 참고).
 - 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25.1%를 기록한 이래 24~26%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로 23.5배로 증가, 중국은 2007년 일본에 앞서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0년 16.8%를 기록한 이래 15~17% 수준에서 머물다가 2015년 20.7%, 2016년 21.4%로 1992년 대비 16.9%p 상승함(그림 2 참고).

그림 1.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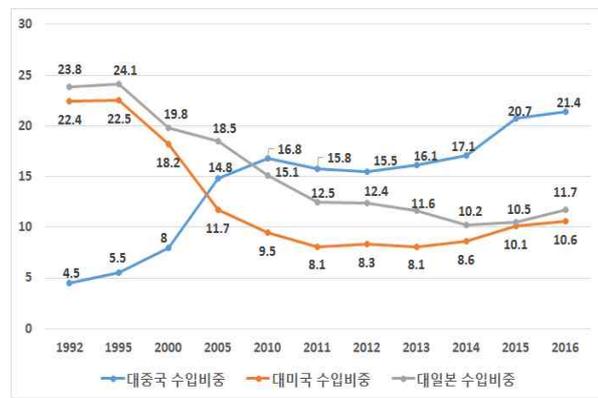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그림 2.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입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수교 첫해인 1992년을 제외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12억 달러)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한바,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함.
- 이후 대중 수출의 감소세 확대 속에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대비 40.4% 줄어든 374억 달러로 대폭 축소함.
- 대중 무역흑자 감소는 중국정부의 △ 가공무역 축소 △ 수입대체 전략 추진 △ 재중 한국기업 현지 생산·조달 강화 등으로 인하여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교역이 감소한 데 기인함.5)
-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고 일반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가공무역: 2005년 41.5% → 2016년 25%, 일반무역: 2005년 42.4% → 56.6%).
- 중국이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글로벌 생산체인에 있어 중국 중간재, 자본재 현지화 생산 및 자체 조달이 증가함(그림 3 참고).
-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가공무역에서의 자급도 향상은 가공무역용 수출이 49.6%(2015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6)(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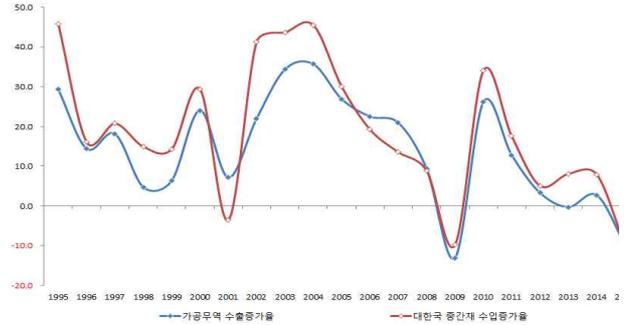
5) 양평섭, 박민숙(2017),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양평섭, 박민숙(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3. 가공무역의 수입의존율과 현지조달율의 변화



자료: 양평섭, 박민숙(2016)에서 인용.

그림 4.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증가율과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



자료: 양평섭, 박민숙(2016)에서 인용.

2) 교역구조 변화

■ **[교역 품목 고도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보완적인 분업구조가 형성·심화됨에 따라 한·중 수출입 교역 품목구조가 점차 고도화됨.

-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1992년 철강판,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인조섬유 등 주로 공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중심이었으나, 2016년에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수출 품목이 고도화됨(표 3 참고).

표 3.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199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철강판	420	반도체	24,236
합성수지	29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584
선재봉강 및 철근	235	무선통신기기	6,303
가죽	141	합성수지	6,092
인조섬유	130	석유화학중간원료	5,847
인조장섬유직물	98	자동차부품	5,673
종이제품	90	석유제품	4,593
섬유 및 화학기계	76	컴퓨터	3,028
석유제품	74	기초유분	2,822
기타 석유화학제품	69	철강판	2,818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음영부분은 대중 10대 수입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표 4. 한국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199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식물성물질	657	반도체	11,279
원유	223	무선통신기기	6,663
인조단섬유직물	222	컴퓨터	5,870
시멘트	214	철강판	4,027
석탄	210	산업용 전기기기	3,483
견직물	178	의류	3,450
곡실류	142	정밀화학원료	3,089
정밀화학원료	10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161
면직물	103	기구부품	1,422
기타 농산물	103	자동차부품	1,372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음영부분은 대중 10대 수출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7) 양평섭, 박민숙(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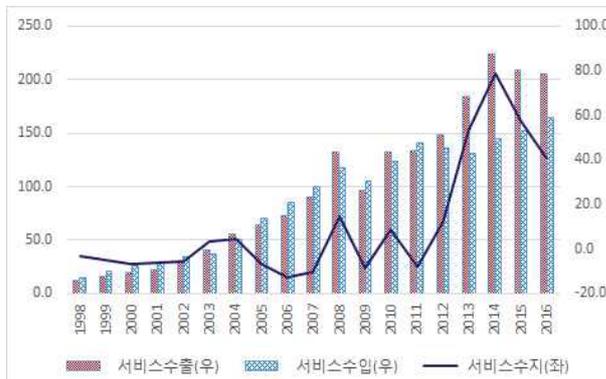
- 대중 수입품목도 1992년 식물성물질, 원유, 섬유류 등 농산물 및 광산물 중심에서 2016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위주로 고도화됨(표 4 참고).
- 수출입 10대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수는 1992년 0개에서 2016년 6개(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철강판)로 증가하였고, 이는 1992년 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2016년 산업 내 수직 분업구조 또는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한 데 기인함.

■ [서비스 무역 확대] 한·중 교역은 상품 교역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중 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이 완료되면 서비스 무역이 한·중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8억 8,865만 달러로 7.3배 증가하였고, 전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2%에서 2016년 18.1%로 지속 확대됨.
- 대중국 서비스수지는 1998년 3.25억 달러 적자 기록 이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가 2012년 12.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최대 흑자치 78.73억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40.79억 달러 흑자로 하락함(그림 5 참고).
 - 대중 서비스수출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22.1%으로 증가했고, 대중 서비스수입 비중도 동기간 6.1%에서 14.9%로 증가함(그림 6 참고).
 - 2016년 대중 서비스수지 구조를 보면, 서비스수지 흑자규모인 40.79억 달러 중 여행수지(64.27억 달러) > 운송수지(20.31억 달러)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17억 달러) 순으로 흑자폭이 컸고, 가공서비스수지(-54.94억 달러)는 큰 적자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대중 상품교역액과 비교하면, 대중 서비스교역액은 2000년 대중 상품교역액(313억 달러)의 14.7%를 차지하였고, 2016년 대중 상품교역액(2114억 달러)의 17% 수준으로 비중이 소폭 확대됨.
- 향후 한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무역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 시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의 여행업, 컴퓨터·정보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개방 확대에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한·중 서비스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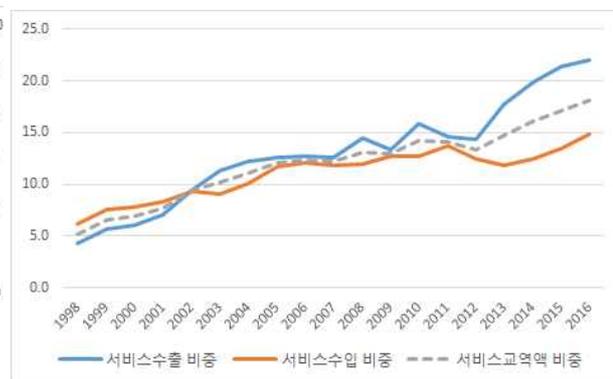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 교역 통계.

그림 6. 한국 서비스교역 중 대중국 서비스교역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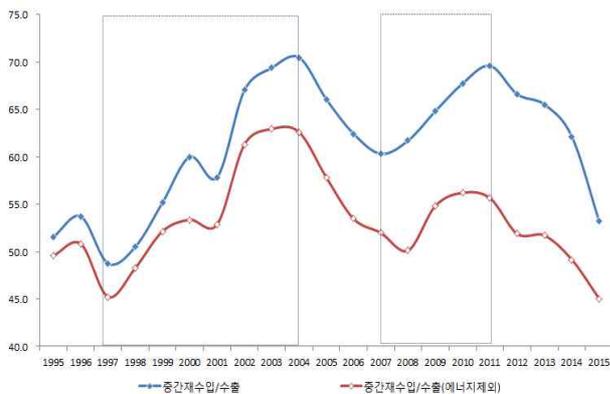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 교역 통계.

3) 한·중 교역 현안 과제

■ [대중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 중국의 △ 무역·산업 정책의 고도화 △ 내수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 중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중 수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였고, WTO 가입(2011년)과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2009년)한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수입은 완제품 수입 → 완제품 대체 및 부품·소재 수입 → 부품·소재 수입대체의 발전과정을 거침.
 -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2005~08년 하락세로 전환, 2009~11년 재상승, 2012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순환과정을 거침(그림 7 참고).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대·전환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중간재 중심의 불균형한 대중 수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에 집중된 구조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소비재 비중은 2015년 3.8%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그림 8 참고).
 - 향후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비중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되며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비중 감소는 중간재 위주 구조를 가진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7.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율



자료: 양평섭, 박민숙(2016)¹⁰⁾에서 인용.

그림 8.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구조

	연도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전체	소재	부품
구성 (%)	1995	14.6	5.3	80.0	69.2	10.9
	2000	11.9	3.2	84.9	64.6	20.3
	2005	20.9	2.3	76.8	39.2	37.6
	2010	20.8	3.0	76.2	35.0	41.2
	2015	17.8	3.8	78.4	27.8	50.6
연평균 증가율 (%)	2002~2008	19.9	22.9	22.0	17.5	29.1
	2009~2015	5.4	9.4	6.7	0.9	11.4
	(2013~2015)	(0.2)	(4.8)	(1.7)	(-62)	(7.3)

자료: 양평섭, 박민숙(2016)¹¹⁾에서 인용.

■ [한·중 FTA 활용도 제고] 한·중 FTA 효과는 발효 1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현 단계에서는 한·중 FTA 협의사항 이행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재개를 통해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로 인해 2014년 이후 대중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나, 2016년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10.4%)를 유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 수입 비중도 수입 비중도 2015년 대비 0.7%p 소폭 증가함.

9) 양평섭, 박민숙(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상동.

11) 상동.

- 또한 한·중 FTA 발효 이후 농축산임업, 석유화학, 기계류 관련 일부 품목의 대중 수출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¹²⁾
- 다만,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FTA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양국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FTA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특히 인력·자금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양국 정부간 비관세장벽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함.

■ **[중국과의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 한국은 1993년 이후 대중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 중국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여 한·중 간 WTO 분쟁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통상분쟁은 반덤핑 조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WTO 분쟁이나 상계관세 분쟁은 겪지 않음.
 - WTO 통계(1995.1.1~2016.6.30)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23건(전체 86건 중 26.7%)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임.
 -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는 27건(전체 184건 중 14.7%)으로, 한국은 미국(35건), 일본(32건)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는 국가임.
-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상계관세 조치가 국제통상분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중 통상갈등이 WTO 분쟁 및 보조금 관련 분쟁으로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화학 및 철강은 한·중 간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이며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계관세 분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됨.

나. 투자

1) 한·중 투자 현황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1992년 수교 당시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약 24배 성장하였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부터 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 해외투자액 중 대중국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최대치(39.4%)를 기록한 후 2008년부터 10% 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중국은 9.4%의 비중을 차지하여 미국(36.6%) 다음으로 한국의

12) 이규엽, 이준원, 정민철(2016), 「한·중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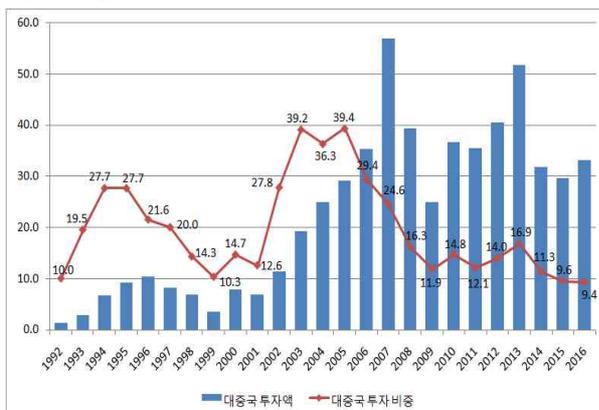
제2 투자대상국임¹³⁾(그림 9 참고).

- 신규법인 수도 2006년 2,389개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695개를 기록함.
- 최근 대중국 투자액 및 비중의 하락세는 중국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 중국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투자액이 감소한 데 기인함.

■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규모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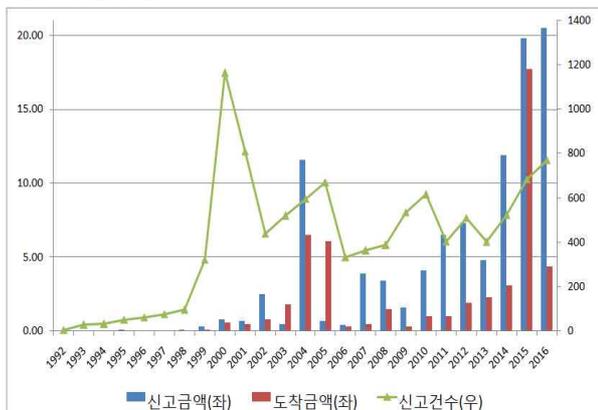
-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도착금액)과 신고건수는 1992년 약 280만 달러, 6건에서 2016년 4억 4천만 달러, 770건으로 지난 25년간 각각 157배, 128배씩 증가함(그림 8 참고).
- 그러나 중국 상무부 최신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미국, 호주 등에 집중됨.¹⁴⁾

그림 9.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0.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중 간 상호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25년 동안 △ 세계 경제의 흐름 △ 양국의 투자정책 △ 기업의 투자 목적에 따라 변화해왔음.

-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시기별로 보면, 아시아 외환위기 전까지(1992~97년)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무역형 중심의 투자가 증가했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2013년까지 이전의 투자규모를 회복하는 단계를 거쳤으나 최근 투자액과 비중이 다시 둔화하는 추세임(그림 9 참고).
-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외자유치 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지역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처 다변화를 꼽을 수 있음.

13) 2016년 한국의 해외투자 상위 5개국(투자액 기준): 미국(36.6%), 중국(9.4%), 케이만군도(9.2%), 베트남(6.4%), 홍콩(4.3%).

14) 중국 상무부, 「2015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p. 42~46. 2016년 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바, 2015년 통계로 서술함.

- 중국은 2000년대부터 해외진출전략(走出去)을 추진하면서 대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자원 개발, 기술 도입, 신시장 개척 등의 측면에서 중국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으나 최근 금융·부동산·문화 등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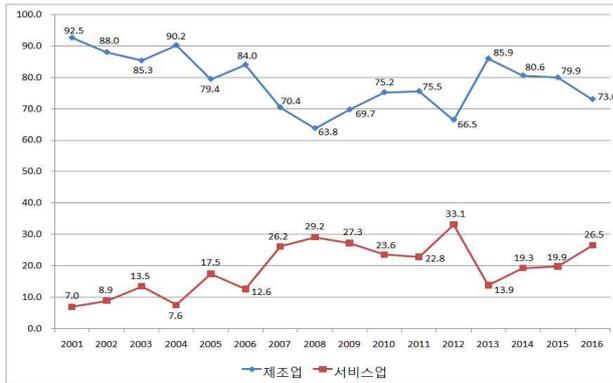
2) 투자구조 변화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된 투자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5년간 기업의 경영환경 및 중국 내 투자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관찰됨.

- **[업종]** 제조업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증가폭이 감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업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그림 11 참고).
 - [제조업] 수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전자·IT·자동차·석유화학 등으로 주요 투자 업종이 고도화됨.
 - ※ 2016년 대중국 제조업 투자액은 24억 1천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4개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9.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2%) △식료품 제조업(9.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8.5%)임.
 - [서비스업] 초기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위주였으나 점차 예술·스포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됨.
 - ※ 2016년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액은 8억 7,600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4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3.6%) △도매 및 소매업(2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6%) △부동산업 및 임대업(12.4%)임.
- **[목적]** 투자목적별로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을 위한 투자 위주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룸.
 - 투자건수 기준으로 1992년에는 수출 촉진 94건(54%), 저임 활용 53건(30.5%), 현지시장 진출 4건(2.3%)이었으나, 2016년에는 수출 촉진 90건(12.9%), 저임 활용 37건(5.3%), 현지시장 진출 533건(76.7%)을 기록함.
- **[주체 및 건당 규모]** 한국의 대중국 투자 주체는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당 투자규모¹⁵⁾도 수교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에 의한 대중국 투자액 비중은 1992년 62%에서 2016년 22%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36.6%에서 75.8%로 증가한바 대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주도하면서 투자규모가 대형화됨.
 - 건당 투자규모는 1992년 79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5만 달러로 증가하여 건당 투자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2013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수교 이후 대중국 투자는 주로 강소성, 광둥성, 북경시, 산둥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됨(그림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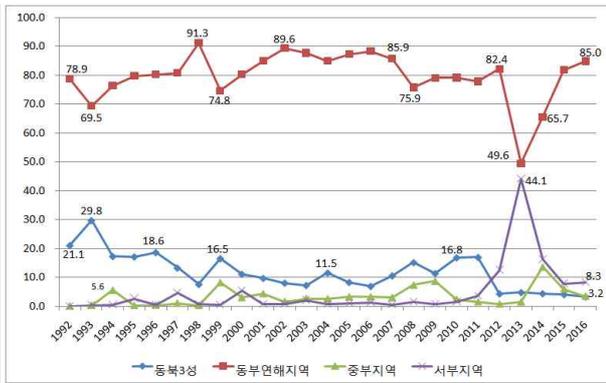
15) 건당 투자규모=투자금액/신규법인수.

그림 11.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 (단위: %)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2.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 비중¹⁶⁾ (단위: %)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지난 25년간 대체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편차가 두드러짐.

- 수교 이후 2001년까지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2~05년까지는 화학, 전기·전자, 운송용기계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표 5 참고).
-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국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약 17억 달러로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지분 인수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액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현황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1건 중 반도체, 컴퓨터 등 제조업 관련 분야가 16건(52%)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33건 중 24건(73%)이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됨.¹⁷⁾
- 한편 2016년 대한국 서비스업과 제조업 투자 비중은 각각 56.1%, 42.9%로 제조업 비중이 증가함.
- 2016년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액(도착금액 기준)은 2억 4,700만 달러로 부동산·임대(32.2%), 비즈니스서비스업(31.6%), 도·소매(유통)(21.7%)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한국 제조업 투자액은 1억 8,900만 달러로 기계·장비업(81%)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함.

표 5. 최근 중국의 대한국 업종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전체	44.8	26.5	31.1	80.7	188.6
서비스업 전체	131.1	193.6	280.4	1692.3	246.7
도·소매(유통)	16.8	12.9	28.3	127.6	53.6

16) 중국 4대 지역분류는 △ 동북3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 동부 연해지역: 강소성, 광둥성, 복건성, 복경시, 산둥성, 상해시, 절강성, 천진시, 하북성, 해남성 △ 중부지역: 강서성, 산서성, 안휘성, 허난성, 호남성, 호북성 △ 서부지역: 감숙성, 귀주성, 사천성, 섬서성, 운남성, 티베트자치구, 중경시, 칭하이성 등으로 분류함.

17) KOTRA(2016), 「중국의 한국기업 M&A 현황」(<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49308>, 검색일: 2017. 8. 10).

표 5. 계속

업종	2012	2013	2014	2015	2016
음식·숙박	34.5	37.7	31.2	19.4	6.1
운수·창고(물류)	4.1	10.5	7.0	7.5	8.9
통신	0.1	0.0	0.4	3.4	0.1
금융·보험	55.9	0.0	0.2	1198.2	0.4
부동산·임대	9.7	90.5	204.3	228.5	79.4
비즈니스서비스업	8.4	39.5	5.8	64.5	78.0
문화·오락	1.5	1.9	3.0	42.7	16.6
공공·가타서비스	0.1	0.5	0.2	0.5	3.7

주: 도착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3) 한·중 투자 현안과제

■ **[상호 투자 확대]** 한·중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단방향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변화하는 추세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여전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상호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격차를 축소해나가야 함.

- 2013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 추세이나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33억 달러인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함.
-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이 낮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격차가 상당한바, 한국의 투자 개방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낮은 투자 개방도가 중국 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규모 축소 및 속도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¹⁸⁾
- 한국 내에서는 중국 자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 자본 유치 및 활용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함.
- 한국의 대중 투자의 경우도 중국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와 외자의 적극 이용에 관한 통지」¹⁹⁾ 발표(2017년 1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판)」²⁰⁾ 시행(2017년 7월) 등을 통해 외자유치 확대 및 외국인투자 업종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서비스업 투자로의 확대]** 한·중 FTA 후속 협상 추진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협정 수준을 높이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고

18)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7. 1), 「중국의 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19) 「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20)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7年修订)」.

FTA를 활용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정부가 서비스업을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에 따라 도시화 및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서비스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구(FTZ)와 일부 시범지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선도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 정책을 참고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 비교우위에 입각한 한국 서비스업 맞춤형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를 구성하여 중국과 FTA 후속 협상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금융통화

1) 한·중 금융기관의 진출 현황

■ 한·중 수교 후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이래로 한·중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중국 내 한국 금융기관은 은행 15개 사, 보험사 16개 사, 증권사 18개 사이며, 한국 내 중국 금융기관은 은행 6개 사, 증권사 1개 사임(표 6 참고).
- 한국계 은행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의 한국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자본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의 형태로 진출함.
- 6개의 중국계 은행이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 지점을 설립했고 2017년 7월 중국계 증권사 1곳이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음.

표 6. 한·중 금융기관의 진출 현황

한 → 중	은행	현지법인(5개), 사무소(3개), 지점(7개) 우리은행('07.11), KEB하나은행('07.12) 신한은행('08.4), 기업은행('09.6), 국민은행('12.11)
	보험사	설립 형태별: 현지법인(6개), 사무소(10개) / 보험사 성격별: 생명보험사(7개), 손해보험사(9개) 삼성화재('05.4), 삼성생명('05.5), 현대해상('07.3), KB손해보험('09.11), 삼성생명('12.1), 한화생명('12.11)
	증권사	현지법인(10개), 사무소(8개) 한화투자('08.6), 미래에셋('08.8), 동부증권('09.1), 한국투자증권('10.11), KTB투자증권('10.12), NH투자증권('11.1), 아이엠투자증권('11.5), 미래에셋('11.9), 하나금융('11.10), 키움증권('15.4)
중 → 한	은행	6개 지점: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산은행, 중국광대은행, 중국농업은행
	보험사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과 한국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여 한국 보험시장에 진출
	증권사	초상증권

주: 표에 명시한 중국 진출 한국 금융회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관이고 () 안의 연도는 개설 시기임.

자료: 금융감독원 해외점포 현황('16.12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16.12 기준) 및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중 금융협력은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발전하였고,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보험·증권 분야에 걸쳐 한국 금융기관의 대중 진출이 확대됨.

-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중국 베이징 대표처를 설립했고, 중국이 WTO 가입(2001년) 이후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대중 진출이 활발해짐.

- 2006년 말 중국의 위안화 업무 취급지역과 고객제한 규정이 폐지된 후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점진적으로 확대
- 2014년 말 지점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운영 규정 폐지, 위안화 영업신청 자격 조건 완화 등 외자은행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지 영업 환경이 개선됨.
- 1995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설치했고,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직후 보험업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내 보험사의 중국 진출이 확대됨.²¹⁾
-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한국은 중국 증권시장에 부분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됨.²²⁾
- 2008년 푸르덴셜운용자산이 국내 최초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²³⁾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17.6 기준) 19개의 한국 투자기관이 QFII 자격 보유
- 2014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²⁴⁾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17.6 기준) 39개의 한국 투자기관이 RQFII 자격 보유
- 한편 1994년 중국은행이 중국 최초로 한국에 진출하여 서울 지점을 설립한 후 현재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 중국계 은행 지점이 설립됨.²⁵⁾
-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15.9)과 한국알리안츠생명(16.4)을 인수합병하여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
- 중국 초상증권이 2011년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로 리서치 업무만 담당해오다가 2017년 6월 29일 한국 금융위원회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중국 본토 증권사 중 최초로 국내에 진출함.

2) 한·중 금융당국 간 협력 현황

■ [금융위기 공동대응 및 위안화 국제화 협력]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라 △ 통화스왑 △ 역외 위안화 인프라 구축 △ 규제 완화 측면에서 협력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후속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통화스왑] 한·중 최초의 통화스왑 협력은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²⁶⁾ 합의를 통해 회원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협정틀 내에서 시도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함.
 - 2008년 12월 최초로 1,800억 위안(3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2011년 10월 통화스왑 규모를 3,600억 위안(76조 원)으로 확대했고, 2014년 10월 3,600억 위안의 통화스왑 체결²⁷⁾
- [인프라 구축]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원/위안화 청산은행 설립을

21) 중국은 WTO 가입 직후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지사 설립과 중외 합자(외자 51% 미만) 설립만 허용하다가 2003년에 외자 독자 설립을 허용하였고, 생명보험사는 2004년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에 따라 중외 합자(외자 50% 이하) 설립만 허용하여 현재까지 규정 유지.

22) 중국은 외국계 증권사의 독자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중외 합자 설립의 경우 외자 지분을 1/3까지 허용하다가 2012년 외자증권투자회사설립규정(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에 따라 49%까지 허용하고 있음.

23)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증권시장(A주) 투자 자격을 지닌 외국인 투자기관.

24)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직접 조달한 위안화(RMB)로 중국 증권시장(A주) 투자 자격을 지닌 외국인투자자.

25) 유광열(2009), 「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 동향과 향후과제」, p. 7, 한국금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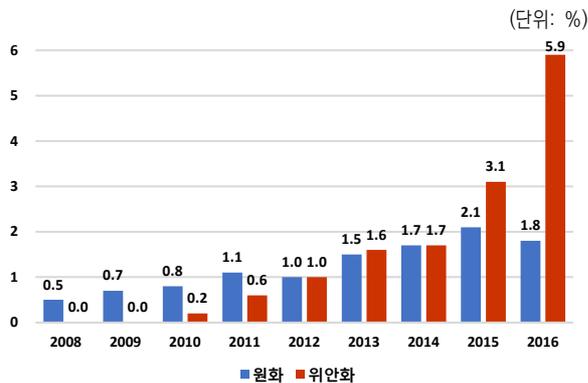
26) 한·중·일, ASEAN 국가가 외환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각국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이행을 계약한 것으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함.

27) 한·중 양국 실무진 차원에서 통화스왑 연장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음.

추진하여 양국의 금융통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장려할 것을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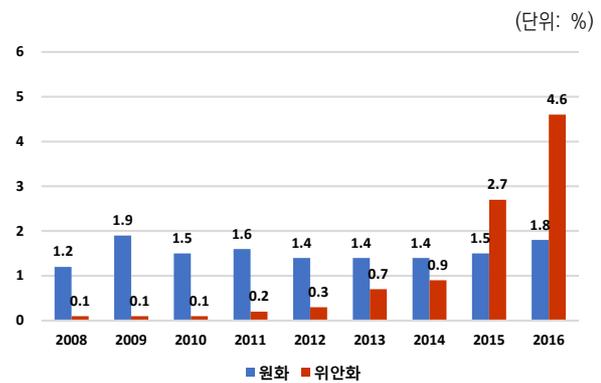
- 2014년 7월 서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서울 소재의 중국교통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2016년 6월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원화 청산업무 개시
- 2016년 대중 무역의 위안화 결제비중이 수출 5.9%, 수입 4.6%까지 확대되었으나 원화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음(그림 13, 그림 14 참고).

그림 13. 대중 수출의 결제통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그림 14. 대중 수입의 결제통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 [규제완화]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 및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한·중 자본시장 교류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에게 RQFII 자격 부여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는바,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의 RQFII 자격을 취득했고, 2015년 10월 RQFII 투자 한도가 1,200억 위안으로 확대됨.
- 중국 투자자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²⁸⁾ 자격을 획득하여 해외 채권 및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한국 상장채권 규모는 약 17조 원('16.3 기준)²⁹⁾, 상장주식 규모는 약 10조 원('17.6 기준)으로 2013년 12월보다 각각 약 43%, 20% 증가함.

■ [AIIB를 통한 협력] 한국은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인 AIIB³⁰⁾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하는 신 금융질서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 2017년 6월 기준 AIIB 회원국은 80개국이며, 중국이 32.02%의 최대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4.02%를 보유하여 5번째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함.
- AIIB 제1차 연차총회는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연차총회는 2017년 6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 현재 AIIB가 승인한 사업은 16건, 후보 사업은 10건으로 주로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음.³¹⁾

28) 적격국내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자격을 지닌 중국 금융기관.

29) 금융감독원 외국인증권투자동향 각 연도(채권보유현황 자료의 경우 2016년 3월까지만 공개하고 있음).

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국의 제안으로 2016년 1월에 출범

- 이 중 한국이 참여한 AIIB 승인사업으로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참여한 ‘인도 인프라 펀드 조성사업 (India Infrastructure Fund)’이 있고, 후보사업 중에는 한국수력발전소가 수주한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 건설사업(280 MW Nenskra Hydropower Plant)’이 있음.³²⁾

표 7. 한·중 관계 발전에 따른 금융협력

한·중 관계	양국 금융협력 특징	주요 내용
우호협력관계 (1992~97년)	수교 후 양국의 교역 급증에 따른 금융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베이징에 대표처 설립 • 양국은 매년 금융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협력 발전을 논의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1998~2002년)	아시아 외환위기 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은 상호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교환과 인력지원을 활성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출범하여 역내 국가의 공조체제 하에 한·중 금융협력을 추진
협력동반자관계 (2003~07년)	중국이 WTO 가입 후 외국 금융기관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점진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WTO 가입 직후 외자보험사 설립조건을 완화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 2006년 11월 중국이 외자은행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条例)를 통해 외자은행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국계 은행이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확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부문에 충격이 발생하자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방 확대와 제도적인 금융협력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800억 위안(3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 3,600억 위안(76조 원)으로 규모 확대. • 2008년 한국 투자기관이 QFII 자격을 취득하여 중국 증권시장 참여 •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RQFII 자격 취득 및 투자한도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개 설과 청산은행 구축을 추진 • 2015년 한·중 FTA 체결 • 2016년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

자료: 저자 작성.

3) 한·중 금융협력의 현안과제

-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의 경영난] 수교 이후 한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은 한·중 무역·투자 증가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주로 한국 교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 현지화 수준이 낮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중국 내 한국계 은행 현지화 지표가 2등급('15 하반기), 3⁺등급('16 상반기), 2⁻등급('16 하반기)으로 전반적으로 현지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³³⁾

31) 이현태 외(2017),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2) 상동.

33) 현지화지표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별 영업활동의 현지화 수준과 은행 전체적인 국제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지직원 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현지고객 비중 등 5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2016년 상반기부터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1+가 현지화 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임.

- 2016년 한국계 은행의 순이익은 22.7억 달러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은행이 보유한 총여신에서 부실채권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None Performing Loan Ratio)은 1.3%로 여신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1년보다 0.5%p 확대됨(표 8 참고).
- 민관이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 등 신 금융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수익 모델 창출과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표 8.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순이익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2011~16년)

(단위: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이익	142.4	95.7	44.2	105.7	20.9	22.7
고정이하여신비율	0.8	0.4	0.6	1.1	1.4	1.3

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연도 12월 집계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 **[낮은 수준의 원/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청산은행의 설립을 통해 자국통화의 무역결제비중 확대, 거래비용 및 환리스크 감소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효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위안화 결제 비중은 대중 수출입에서 모두 한 자릿수의 비중을 차지하여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원화의 결제비중은 대중 수출입에서 모두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³⁴⁾(그림 9, 그림 10 참고).
 - 위안화 결제 증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위안화 조달비용이 홍콩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임.
- 한·중 양국 금융기관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운용상품 개발을 통해 원/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이중성]** 중국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추진에 있어 외국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은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유고 수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바, 중국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후강통(沪港通)³⁵⁾, 선강통(深港通)³⁶⁾, 채권통(債券通)³⁷⁾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짐.
- 중국 당국의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한·중 투자자의 자본투자 활동을 억제하므로 정부간 협정이나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한 대책이 필요함.
 - 2015년 12월 이후 QDII 신규 투자한도를 20개월 연속 동결하여 중국 금융투자자의 신규 해외 자산 투자 활동이 제한됨.
 -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자본시장 통제에 의해 한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중국

34) 한국은행 경제통계.

35)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가 가능한 제도로, 중국인 투자자는 상하이 거래소를 통해 홍콩거래소 상장된 주식, 외국인투자자는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가능.

36) 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가 가능한 제도로, 중국인 투자자는 선전거래소를 통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외국인투자자는 홍콩거래소를 통해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가능.

37) 중국 본토와 홍콩의 채권시장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본토의 채권에 투자 가능.

자본시장 진입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음.

- 한·중 FTA 금융 서비스부문에서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조치를 합의했으나, 중국의 현 대외개방정책 이상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은바, 후속 협상에서 양국의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정책적 시사점: 한·중 경제협력의 신(新) 패러다임 구상

가.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통상관계 구축

■ **[한·중 FTA 실효성 제고]**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FTA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국이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내수주도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서비스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은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국 서비스투자를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중국 당국의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조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바, 한·중 FTA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한·중 간 분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중간재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함.

- 중국정부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중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한·중 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있고, 대중국 주력 흑자품목에 대한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교역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중간재 품목의 기술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추진해야 함.
- 대내외적인 제반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 중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등은 대중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함.

■ **[소비재 수출 확대]** 중국정부의 내수주도 성장모델로의 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소비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생산기지에서 주요 소비시장으로 전환하여

중국 소비자 수요에 맞는 중국 특색 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소비재 생산·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2016년 64.6%) 제고,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형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비중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함.
- 중국의 대세계 수입에서도 가공무역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도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비재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 특화 소비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화장품, 의류·패션, 식·음료품,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서는 중국 맞춤형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대중국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다자간 FTA에서의 한·중 협력 강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 추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넘어서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한·중·일 FTA, RCEP 협상 과정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 △ 무역 자유화 △ 투자 활성화 △ 통합된 시장 형성 등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여 역내 FTA 체결을 통해 GVC 효율적 활용과 국가간 분업구조 구축에 유리한바,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내 지역경제 통합은 역내 국가들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서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나. 대중 투자의 신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 **[대중 투자 신 분야 발굴]**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의 전환 및 중국 내 비즈니스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해 투자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바, 첨단 제조업, ICT, 서비스업, 환경·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투자 영역을 다각화해야 함.

- 한국의 대중 투자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야 함.
 - 투자 분야를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3D 프린터, 드론 등 최첨단 제조업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 등 ICT 분야로 확대하여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은 기술개발 교류 확대, 기술 표준화 공동 추진, 지적권 보호제도 마련 등 협력 강화
-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함.
 - 향후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됨.
 - 이에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분야를 기존의 도소매업 위주에서 향후 문화, 관광, 의료, 법률, IT서

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교육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은 파리기후협정 참여국가로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환경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한·중 탄소배출권 시장 통합을 추진해야 함.

■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방식은 그린필드 방식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M&A, 기술 투자 등으로 투자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과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중 간 경합관계가 나타나거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분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의 대중국 투자방식을 그린필드 방식에서 M&A 또는 기술 투자 등으로 다각화하여 한·중 양국이 윈-윈하는 투자 관계를 형성해야 함.
 -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및 ‘홍색 공급망’ 구축은 한국 제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자 기회 요인으로 꼽히는데, 한국은 중국 제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홍색 공급망’과 공생, 공존하면서 중국 제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중국 내 연구개발 및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의 산업 기술 표준화에 일조하고 ‘기술과 지분을 교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한·중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으로의 단방향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에 따른 쌍방향 투자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의 대한국 투자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은 중국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자본이 한국 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중국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 추진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2002년 10억 달러에서 2015년 1456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ODI가 FDI를 초과하여 자본 순수출국이 됨.
 - 중국 해외투자 대상지역 및 분야는 2008년 이전 에너지·자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2008년 이후 선진국 핵심기술, 브랜드, 유통망 확보 등 미국 EU 등 서구 선진국으로 확대·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중국 당국은 외화보유고 감소, 위안화 환율절하 및 중국 자본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에너지·자원,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위주의 해외투자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금융·문화 분야뿐 아니라 한국 제조업 고도화, 혁신 산업 발전, 서비스업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중국자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AIIB를 통한 금융협력

■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따라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은 대중국 무역흑자로 인하여 위안화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한국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이 낮고 위안화 금융시장이 미발달하여 시중은행들의 위안화를 보유·활용할 동기가 적은 구조로 인해 위안화 활용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를 확대하고 중국과 실물 교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 인책을 마련하여 한국 내 위안화 결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기존 주요국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역외 허브 전략을 추진해야 함.³⁸⁾
- 한·중 금융협력 시범지로 지정(2015년 11월)된 중국 산둥지역을 금융협력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중국 기업들의 역외 위안화 대출, 한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o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모두 인정하는 한·중 기업신용평가사 설립(또는 한·중 금융사 간 전략적 제휴) 및 시스템 구축³⁹⁾ 등 위안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위안화 유동성을 한국으로 유입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환류하는 완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역외 위안화 허브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AIIB 활용방안 모색]** AIIB를 매개로 한 한·중 간 금융 협력 강화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고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한편, 북한 인프라 건설에 있어 AIIB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업체, 금융기관, 정부가 협력하는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한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는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 참여할 필요가 있음.⁴⁰⁾
-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新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AIIB와 사업 추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가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통신(5G),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사업 등에 주력해야 함.⁴¹⁾
- 북한은 AIIB 비회원국가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AIIB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향후 AIIB를 활용하여 북한 내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라. 정부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 **[한·중 경제대화 정례 협의체 설치]** 한·중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한 단계 발전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중 경제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 경제대화 협의체’(가칭)를 설치하여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한·중 FTA 이행 모니터링 및 후속협상, 한·중 통상마찰 및 비관세장벽(통관, SPS, TBT) 해결, 한·중 산업단지 및 금융협력 시범정책 추진, 신산업 협력방안 논의, 한·중 기업간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38) 한민수 외(2015), 「주요국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 상동.

40) 이현태, 김준영(2016),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1) 이현태, 김준영(2017),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 해결 등에 대한 대화 채널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 한·중 산업협력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 새로운 통상분쟁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중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북아 정세 및 한·중 양국 정치관계의 변화로 인해 정부간 공식 대화 채널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중 경제 현안 문제를 적시에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례적인 협의체 설치가 시급함.

■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동북아 플러스,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한국 신정부의 국가 전략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각 지역의 역할 및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한·중 지방정부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한·중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현재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는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략 차원에서의 지방교류는 드물고 이벤트성·일회성 교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한국의 대중국 전략(한반도 신경제지도, 동북아플러스 등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전략 내에서 각 지역의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국 지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협력 지역을 선정해야 함.
- 현재 국가전략들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협력은 한·중 FTA 협정문에 명시한 한·중 산업단지 협력(새만금-옌타이(煙臺), 옌청(鹽城), 후이저우(惠州)), 인천-웨이하이(威海)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등이 있음.

■ **[신 국가전략에 기반한 협력방안 모색]** 2017년 5월 한국에는 문재인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2017년 가을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바,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표 9 참고).

-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소득/내수 및 일자리 주도의 거시정책은 향후 소비시장 및 서비스 수요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바, 한·중 양국은 서비스업 발전 및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을 모색
-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경제구조 개혁 조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호 전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
- 중국정부가 신 대외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 신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전략 내 신북방정책(북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신남방정책(아세안, 인도)과 연계성이 높음.
- 경제협력 대상 지역이 유사한 신북방정책-일대(육상 실크로드) 및 신남방정책-일로(해상 실크로드) 간 연계방안을 모색
-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 추진에 있어 AIIB를 활용하여 북한과 연계한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는 '중국 랴오닝성-징진지(京津冀)-중국 전역 및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고, 동해안 에너지·자원 벨트는 '중국 훈춘-북한 나진·선봉-러시아 하산(자루비노)'와 연결하는 한편, 두 벨트 상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를 추진
- 한·중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소프트웨어·ICT와 중국의 하드웨어(공장, 도시, 인프라)가 결합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프라 건설 협력 강화
- 한·중 양국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창업할 수 있는 한·중 창업 플랫폼 확대를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 및 한·중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

표 9. 한·중 국가전략에 기반한 신 경제협력

분야	한국 신정부 국정 전략 및 과제	중국 13차 5개년 계획 (2016~20) 국가전략	한·중 경제협력 분야
거시 정책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내수주도 경제성장 - 공급 측 구조개혁	- 서비스업 협력 강화 및 상호 일자리 창출 - 금융 리스크 전이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정책 공조
대외 정책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지도(북한과 연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 일대일로 - 위안화 국제화 - AIIB를 통한 신국제금융 질서 수립	- 일대일로 연선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협력 - AIIB를 활용한 북한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 - 동북아플러스-일대일로 연계 - 한반도신경제지도-일대일로와 연계된 인프라 사업 추진 및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무역 정책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수호 - 일대일로 무역편리화 추진 - FTA 네트워크 구축 - 자유무역시범구(FTZ)를 통 한 대외개방 심화	- 한·중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 련 및 제도 정비 - 한·중 FTA 이행률 제고 및 후속협상을 통한 무역 증진 및 다각화 - 한국 FTA 허브를 활용한 중국 투자 유치 -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간 무역협 정 체결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산업 정책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 한·중 산업간 새로운 협력체계 및 스 마트공장 생산 네트워크 구축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 명 관련 신산업 육성 및 혁신기술 개발 협력 - 한·중 온라인 플랫폼 협력 및 시장 통합
에너지 정책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협력 - 러시아·몽골·중국·북한·한국·일본 슈퍼그 리드 구축 협력
환경 정책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대기, 수질, 토양 오염 해결 - 생태문명 건설 -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 초국경 오염물(미세먼지 등) 공동 대응 - 환경·저탄소에너지 산업 협력 강화 - 한·중 탄소배출권 시장 통합 추진
지역 정책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 세종시 육성 · 혁신도시 클러스터 육성	-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및 승안(雄安) 신규 건설 - 창장경제벨트 - 지역별 일대일로 참여	- 수도 분산, 산업 클러스터 및 기능 중 심의 도시 건설 경험 공유 - ICT가 결합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인프라 건설 협력
창업 정책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대중창업 만중창신	- 한·중 청년 창업 교류 확대 및 해외알자리 창출 - 혁신 생태계 공동 구축 - 창업정책 추진 경험 공유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중국 각 분야 13.5규획」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한·중 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회원국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산업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몽골-중국-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슈퍼 그리드사업 추진도 협력이 가능
- 장기적으로는 △ 초국경 오염물 공동 대응 △ 환경 산업 기술 발전 및 표준화 △ 환경·금융 분야 시장 통합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 통합에서 한·중 간 협력을 강화
- 한·중 간 양자 협력을 넘어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확대 △ AIIB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자금조달 채널 다변화 △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 및 신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 한·중 공동 제3국 진출방안 모색 등의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한·중 협력을 확대
- 이밖에 양극화,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 식량 및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인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양자·다자 간 협력을 추진·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